



모로코

## 총선 후 경제개혁 가속화 예상

금년 9월로 예정된 모로코의 총선은 모하메드 6세 국왕이 1999년 즉위한 후 처음 실시되는 선거로, 국민들의 잠재되어 있던 정치적 욕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경제개혁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질적인 왕정이 유지되고 있는 모로코에서 5년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하원의원 선거는 최대의 정치적 행사이다. 국왕은 행정부, 상원 등 모든 기관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하원만은 국왕의 임명권 밖에 있는 권력기관이다. 따라서 총선은 국왕의 통치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반영되고, 국왕이 임명하는 행정 책임자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권 내의 유일한 수단이다.

### 중도좌파, 9월 총선에서 우세 예상

모로코의 정치는 왕정 옹호파, 중도좌파, 이슬람원리주의 정당 등 크게 3개 정

파가 주도하고 있으나,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정당은 없다. 현재는 중도좌파인 인민사회당(USFP)을 중심으로 왕정 옹호파 및 다른 좌파 정당 등 7개 정당이 연합한 형태의 해정부가 구성되어 있다.

모로코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은 영향으로 독립 초부터 사회주의 계열의 지식인들이 두터운 계층을 형성하여 왔으며, 현재도 좌파 성향의 정당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현 국왕이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으나, 국왕의 절대적인 영향력에 대한 불만과 왕정체제가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이들 지식층 사이에 점차 확산되고 있다.

회교도가 절대 다수인 국민들의 일반 정서와는 동떨어진 국왕의 친미적 태도로 인해 이슬람원리주의 정당의 영향력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자칫 정치적 소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슬람원리주의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심정적 지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집권

이 자칫 1990년대의 알제리와 유사한 내전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국민들은 비교적 온건한 중도좌파 정당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도 역시 왕정 옹호정당, 좌파 정당, 이슬람원리주의 정당간의 득표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절대 다수를 점하는 정당이 없어 중도좌파 중심의 연립정권이 계속 집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선거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여성에게 10% 의석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며,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등 1955년의 초기 선거법을 개정한 선거법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되는 선거여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개정 선거법은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군소 정당의 난립이 우려되기는 하나, 여성의 정치참여 지원, 문제가 된 선거구 경계의 합리적 조정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총선을 큰 사고 없이 평화롭고 원만하게 치른다면 모하메드 6세 국왕은 국민으로부터는 개혁주의 성향에 대해 호의적인 평판을 얻는 한편, 선거에서 승리하는 정파와 우호적인 행정부를 구성함으로써 국가 통합과 안정을 공고히 하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 총선 후에도 민영화사업 지속될 듯

농업과 인광석에 의존하던 모로코의 경제구조는 제조업과 관광산업 쪽으로 차츰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말에 3년간 지속된 가뭄으로 경제성장이 멈추고 정부의 보조금 지급 증가로 재정수

지 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된 경우에서 보듯이, 아직도 농업은 국민의 절대 다수가 종사하며 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산업이다.

특히, 이농현상이 심화되면서 별다른 기술과 자본이 없이 도시로 유입된 농촌인구는 실업, 빈곤, 사회불안 등 여러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집권층은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고용 증대와 빈곤 퇴치를 위한 예산 지출을 늘리고 있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재정지출을 늘여서라도 고용을 증대시키고 빈곤을 퇴치할 것을 주장하는 좌파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높아질 경우, 새 정부의 경제개혁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고용 증대를 위하여 제조업과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한편,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 자유화와 국영기업 민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영기업 민영화는 세수가 한정된 상황에서 선거에 대비한 각종 재정지출 증가로 고민하는 동국 정부에게는 가장 확실한 자원조달 방법일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민영화 대상 국영기업은 전화회사(Maroc Telecom), 담배회사(Regie des tabacs), 3개의 국영은행(BCP, BNDE, CIH), 우체국(Barid Al-Maghrib), 자동차 조립공장(Somaca) 및 설탕회사(Sucrafor) 등이며, 동국 정부는 총선 이후에도 세수확보와 경제개혁 추진 차원에서 계속 국영기업 매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기업경쟁력 제고가 고용 증대의 관건

세계은행과 모로코 산업무역부가 공동으로 859개 모로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쟁력 분석에 따르면, 산업화의 초기 단계에 있는 모로코 기업의 경쟁력은 인도, 중국 등 다른 개도국에 비하여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로코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수준은 중국의 2배, 인도의 4배에 이르지만 생산성은 높은 임금수준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의 과학기술전문교육 수료자 비율도 경쟁국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1.4%에 불과하며, 직업훈련 이수자 비율도 태국이나 인도 근로자의 평균 30%에 비해 크게 낮은 15%에 그치고 있다. 한편, 모로코 기업들은 은행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도 어려우며, 조달금리도 중국(5.9%), 태국(7.8%)보다 높은 13.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밖에 정부의 비현실적인 각종 규제, 공무원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 등의 열악한 기업환경은 기업경쟁력 약화로 연결되어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국내기업조차 재투자를 꺼리는 실정이다. 이런 여건으로 인해 외국 기업들도 현금 수입이 보장되는 관광업 등에 주로 투자하고 있으며, 고용창출과 기술이전 효과가 큰 제조업에의 투자는 기피하고 있다.

정부가 바라는 고용 증대를 통한 사회안정과 번영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가능하고, 이러한 투자의 유치를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총선 후 출범할 정부는 기업경쟁력 강화로 직결되는 국영기업 민영화, 이자율 인하, 직업훈련 지원, 각종 규제 철폐 등의 경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韓明煥】